

# 경제위기 이후의 아세안과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

김종길\*\*

## I. 서론

1997년 후반 동아시아국가들이 경제위기에 직면하기 전까지 1960-70년대의 아시아신흥공업국(ANIEs), 80년대 중반 이후의 아세안,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의 경제성장은 실로 경이적이었다. 이들의 성공담은 그 후 90년대에는 인접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로 전승하는 계기를 맞게된 것이다. 제 2차 세계대전의 종전 후 일본을 필두로 동아시아에서 한 나라의 경제성장이 인접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소위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이들 후발 4개국에까지 전파·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외환 및 경제위기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성장 및 성장의 전파 메카니즘에 대한 믿음에 큰 혼란을 주었다. 물론 아세안 중 싱가포르는 외환위기 발발 초기에 일시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받았을 뿐이며, 필리핀의 경우에도 초기의 일시적 타격보다는 에스트라다 정권하의 정치적 불안정이 경기침체의 보다 큰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의 아세안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관심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시발국인 타이랜드를 포함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3국이다. 최초로 큰 타격을 입었던 타이랜드와 말레이시아가 위기발발 1년이 경과한 이후 각각 다른 방법을 통하여 경기회복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정상적 회복을 향해 심한 진통과정을 겪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곳은 격심한 경제적 충격 위에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경제위기의 국면이 아직도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회복의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 이 논문은 2000년도 인하대학교 교수연구진흥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기적'의 수준까지 이끄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어느 누구도 그 시기, 속도 및 깊이를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위기의 발발과 함께 그 설득력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그것이 동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이자 성장 메카니즘에 따르는 필연적 결과라는 비판적 시각까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경제위기라는 타격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과는 별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일시적, 돌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주장 역시 위기발발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상이한 주장에 대하여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은 소위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 또는 그 성격에 관한 분석일 것이다. 이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진 후 이러한 성장 메카니즘과 동아시아의 외환(또는 금융) 및 경제위기와의 연관성이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시아의 경제위기와 함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그 존재가치(raison detre)를 잃은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동남아의 태일랜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3국에서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가? 마지막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밟고있는 아세안에서 향후 소위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관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을 다양한 이론을 통하여 살펴본 뒤 이 메카니즘의 성격을 도출해 본다. III에서는 동아시아 중 특히 아세안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장 메카니즘이 아세안의 외환, 통화위기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IV에서는 최초의 위기가 극심한 경기침체로 진행된 아세안에서 그동안 시행되었던 구조조정과정의 방향, 성격, 성과 및 문제점을 간략히 점검한 뒤 향후 아세안에서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성격과 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 II.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

### 1. 이론적 고찰

일본, 아시아 NIEs, 아세안, 중국 및 기타 동남아국가에서 대략 지난 반세기 에 걸쳐 나타났던 일련의 공업화 및 경제성장 현상을 설명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속칭 '동아시아 성장모델'로 불려지고 있는 이들을 각

각의 주안점에 따라 (1)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발전과정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내적 성장모델과 (2)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발전이 상호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대외적인 모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내적 모델 중에는 대략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바 첫째, 구미 선진국의 관점에서 동아시아를 포함하여 개도국 일반의 경제성장을 일반적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설명하는 전통적 '신고전파' 견해가 있다. 둘째, 민간주도에 의한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암묵적으로 가정하는 신고전파 견해와는 달리 공업화 및 경제발전에서의 국가의 능동적 개입과 역할이 강조되는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히 한, 중, 일 등 동북아의 공업화나 성장을 설명하는데 사용된다. 셋째, 자본조달 뿐 아니라 생산 및 수출을 포함하는 제반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국가 못지 않게 외국인 기업이 상대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소위 '외자주도공업화'(FDI-led industrialization) 견해가 있는바, 이 견해는 주로 아세안국가들의 공업화과정의 설명에 적용되고 있다. 대외적 모델에서의 이상의 견해들과는 달리 대외적 모델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발전이 역내 다른 국가에서의 발전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한다. 이 모델은 특히 역내 선발국과 후발국간의 무역과 투자의 교류가 쌍방에 미치는 영향과 전파과정을 분석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의 성장 메카니즘에 관한 이러한 다양한 견해는 모두 실물부문에서의 공급능력 증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경제성장과 공업화로 초점이 맞추어진다. 즉,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생산함수의 관계에서 보는 일반적 '신고전파'모델도, 자본 또는 노동이라는 요소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모델도, 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외국인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 '외자주도 공업화'모델도 모두 실물부문에서의 급속한 생산능력증대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러기 행렬'로 대표되는 동아시아에서의 성장전파에 관한 설명도 결국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통한 일국의 생산능력 증대에 집약되고 있다. 생산능력 증대의 결과로 가능해진 수출확대로 결국 이를 통해 얻어지는 외환수입이 자본재의 수입 및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생산능력증대로 연결될 때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 (1) 대내적 모델1)

- 1) 대내적 모델을 여기서는 세 가지의 견해로 살펴보고 있으나 크게 보면 일반적 형태의 신고전파 견해에서와 같이 투입과 산출이라는 생산함수의 관계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관계설정보다 경제발전의 능동적, 주체적 역할에 보다 큰 관심을 가지는 주관적 관계설정 역시- 특히 발전전략상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신고전파 견해는 자본시장이나 노동시장에서 민간이 주된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발전국가 견해는 정부가 그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외자주도 공업화 견해는 외자기업이 그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분류한 것이다.

#### - 신고전파 견해

먼저, 정통적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는 투입과 산출의 기술적 관계에서 경제 성장을 투입물의 변화에 따른 산출의 증대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 및 기타 선진국의 세계적 연구기관에서 '기적'이라 칭하였던 동아시아의 성장은 이와 같이 실물부문의 생산함수형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자본이 형성되고 저렴하고 양질인 노동력이 투입된 아세안에서는 약 10년이라는 빠른 기간 안에 경이적인 공업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한다. 세계은행이 동아시아의 '기적'에 관한 연구의 대상이었던 8개의 High-Performing Asian economies(HPAEs) 나라에 일본, 아시아 신흥공업 4국 이외에 아세안의 3국(말레이시아, 태일랜드 및 인도네시아)이 포함시킨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World Bank 1993). 이 보고서에서 지적되듯 이들의 높은 성장률은 높은 저축률, 교육에의 투자, 부지런한 노동관행, 활성화된 기업가정신 등 기초적 여건(fundamentals)의 건전성에 기인한다.

신고전파 견해에서는 이러한 모든 경제활동이 민간에 의하여 주도되며, 정부는 시장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조절해 주는 시장 친화적(market friendl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고 있다. 대외적 경제관계에서 또한 동아시아의 높은 투자율이 -수출대금에 의했던 FDI의 유입에 의했던- 선진국으로부터 자본재와 기술도입을 수반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생산성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역과 투자의 확충은 다시금 개방적 경제정책의 채택, 미 달러에 대한 안정적인 환율의 유지 등 효율적인 거시정책의 운용에 크게 힘입은 것으로 지적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성장경험은 어느 국가나 지역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시사된다.

#### - 발전국가 견해

일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대내적 성장모델에는 신고전파적 견해 이외에도, 극동아시아 또는 동북아시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조적 및 제도적 특징을 강조하는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모델은 특히 "동아시아 발전의 핵심요소로서 -자원배분의 방향이 시장친화적인 것이든 또는 시장역행적인 것이든 간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이에 대해 자본과 노동으로부터 헤게모니적 동의를 확보할 수 있었던,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강조한다"(김상조 1999: 94). 일반적으로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론으로 분류되는 이러한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경제발전과정에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해 주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모델의 보다 자세한 자본조달상의 특징에 관해 김수행과 조복현의 지적을 보자: "이 아시아 모델은 세 가지의 상호 연관된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산업

부문은 채권이나 주식발행보다는 주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한다. 다시 말해 아시아 모델은 자본시장에 의거한 시스템(market-based system)이 아니라 은행에 의거한 시스템 (bank-based system)이다. 둘째, 정부가 성장의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부문에 대해 조세나 금융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정부, 은행 및 기업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부는 이 관계를 주도, 조정한다”(김수행 외 1999: 25). 이러한 구조적 동아시아 모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특징 이외에도 기업지배구조의 측면에서의 높은 내부자 지분율과 외부자의 미약한 역할, 경직된 노동시장, 외자기업의 비중이 낮은 독점적 내수시장구조, 선택적 산업정책 등의 특징이 추가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이근 외 2000: 80).

#### - 외자주도 공업화 견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함으로써 공업화를 추구하는 개도국이 당면하는 기본적인 문제는 물론 자본의 부족이다. 자본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의 경우에는 정부부문의 시장개입 (예컨대, 해당산업에 대한 저금리정책, 등)에 의하여 달성되었다. 그러나 필요 자본의 조달에는 차관의 도입이나 외자계 기업의 직접 투자활동 등 외자의 역할 역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한 것이다. 특히, 외자계 기업은 자본조달 뿐 아니라 생산 및 수출에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 즉, 동북아에서 흔히 발견되는 상품 및 요소시장에서의 생산, 분배, 공업화 등 경제적 의사결정이 국가에 의해 주도되는 ‘발전국가’ 성장모델과는 달리 아세안지역에서는 이러한 의사결정이 외국인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sup>2)</sup>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외자 공여국으로서 외자 및 외국기업의 국내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거의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과정 중 필요한 자본의 조달에서 외자(중국의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 한국의 경우는 차관도입)에 크게 힘입었던 것도 사실이다. 즉 외자가 주도적 역할을 한 아세안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에서는 외자가 훌륭한 보조적, 보완적 역할을 한 것이다.

외자주도공업화의 문제점은 외국기업의 적극유치에도 불구하고 토착기업과의 낮은 연계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자면, 수출지향적 외자계 기업들과 토착의 수입대체산업들이 상호 격리되어 있어 외국인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의 효과, 경영 및 마케팅능력의 전수효과, 기타 외부경제의 효과가 이들에게 전파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물론 이들 경제의 흡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90년대 중반까지 아세안에서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대체로 숙련 저임노동력을 이용하여 전자 및 섬유산업을 육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봉쇄수출특

2) 奥田는 특히 개발전략의 관점에서 동북아와는 다른 아세안의 금융부문의 특징을 지적한다 (奥田 英信 2000: 43).

구(export enclave)의 성격이 강했던 것이다.

## (2) 대외적 모델

일국의 경제성장요인을 찾아보는 것도 흥미롭지만 일국의 성장이 다른 국가에 전파되는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특히 이러한 전파 메카니즘이 일국의 성장요소 그 자체에 영향을 줄 때 더욱 그러하다. 한 나라의 경제성장과 그러한 성장의 국제화를 연계시키는 것은 국제간 물자와 자금의 교류이다. 자금의 교류, 특히 선발국으로부터 후발국으로의 FDI유입은 후발국 성장의 필수요건인 자본형성 및 기술진보에 기여한다. 물자의 교류 역시 마찬가지이다. 후발국의 선발국으로 향한 산업제품수출은 자원배분의 개선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강화시키고, 반대로 높은 기술수준의 자본재수입은 기술 및 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물자와 자금의 교류가 동아시아 후발국의 경제성장을 고무하고 촉진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선발국도 산업구조의 전환 및 고도화라는 혜택을 얻게 된다. 결국, 물자와 자금의 교류과정을 통하여 동아시아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은 깊어지고, 경제성장은 확산되고 공업화가 더욱 촉진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아시아발전을 묘사하는 최초의 시도 중 하나가 안행렬(flying-geese) 가설이다(Akamatsu 1962; Kojima 1973; Ezaki 1995). 원래의 구상은 한 국가가(즉, 일본) 패턴을 형성하고 다른 국가들이 이를 따르는 것이다. 이런 발전패턴이 버논(Vernon, 1966)의 상품주기(product cycle)가설과 관련이 있었음은 오래 전부터 인식되었다. 안행렬발전이 '따라잡기'형 상품주기(catching-up product cycle: CPC)모델로 불리는 이유는 Vernon 상품주기설의 일반모형에서는 그 주기가 혁신적 제품의 도입으로 유발되지만 안행렬의 주기는 선진제품의 수입에 의해 촉발되기 때문이다(Yamazawa et al. 1993; Ezaki 1995). 비슷한 맥락에서 Ezaki는 후발 공업화국가의 따라잡기 과정을 '중층적 따라잡기'(multiplex catching-up)라고도 칭한다(Ezaki 1995: 128-9). 이 용어는 특히 일본이 NIEs에 의하여 추월 당하고 NIEs는 또한 ASEAN에 의하여 추월 당하는 현상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sup>3)</sup>

안행렬과 유사한 개념에서 출발하나 지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자본, 무역, 기

3) 일본이 ANIEs에 의하여 추월당하고 ANIEs는 ASEAN에 의하여 추월당함을 의미하는 안행렬 발전 패턴을 비판하면서 Chen은 빠르고 빠른 기술적 사이클과 함께 기러기 무리의 우두머리 역시 빨리 바뀌는 "곡예(aerobatics)"형 발전패턴을 주장하였다(Chen 1995). 살리(Salih) 역시 안행렬가설과 대립되는 의견을 제시한다. "안행렬패턴은 산업의 재배치에서 산업간 연계가 거의 없는 경공업위주의 산업구조에서 눈에 띈다. 기계, 중공업, 및 하이테크산업에서는 산업간 구조에서 보완성이 지배적인바 산업구조가 이러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복제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에서는 안행렬의 경험이 쉽게 확인되지 않는다. 이점은 특히 산업간의 재배치가 소위 말하는 "차입기술"(borrowed technology)에 기초하거나 일본 및 기타 선진공업국으로부터의 자본재, 기술 및 직접투자를 의존하는 ANIEs 및 ASEAN의 경우 사실이다"(Salih 1992: 38).

술의 의존성이 확대되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전체의 활력이 생성되고 유지된다는 와타나베의 '자기순환' (self-circulating) 메카니즘의 가설도 있다(Watanabe 1991). 와타나베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내의 개도국들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무역 및 FDI를 통한 자본과 물자의 역내순환이 순조로웠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즉, 선진기술이 체화된 기계설비의 수입을 통해 실현되는 투자(FDI)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에 의존되었던 공업제품의 국내생산(수입대체)을 이루고 점차 이들 제품의 수출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다 고도화된 자본재의 수입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투자를 형성한다는 것이다.<sup>4)</sup>

## 2.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성격과 문제점

### (1) 성 격

앞에서 논의된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 관한 다양한 이론을 동아시아제국의 공업화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배타적, 독립적이기보다는 서로 보완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공업화나 경제성장에서 자본의 역할을 살펴보자. 신고전파 견해에서는 자본은 민간에 의해 형성된다는 암묵적 가정하에 그 자본이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형성되는 지는 크게 개의치 않고 다만 투입물로서 그 총량 또는 규모에 관심을 가진다. 발전국가 견해에서는 자본의 형성과정 및 그 배분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취급한다. 비슷하게 외자주도공업화 모델에서는 이에 대한 외국자본, 외국기업의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대외지향적 모델에서는 한 국가의 공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본재배치가 인접국의 자본형성에 주는 영향을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견해나 해석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과 공업화를 설명함에는 그 주안적 견해가 시공간에 다르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한 국가에서도 어느 때는 정부주도 메카니즘에 의존하다가 다른 때에는 민간(또는 시장)주도 메카니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 비슷하게, 같은 시점에서도 공간적으로 또는 산업별로 정부주도의 산업화가 중요한 곳이 있는 반면 외자주도 산업화가 보다 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동일한 공업화나 경제성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시공간에 다를 수 있다는 지적

4) 고지마(小島)와 와타나베(渡辺)가설의 주요한 차이점은 전자가 FDI가 경제적 다이내미즘을 아시아전역에 전파하는(transmit) 역할을 강조한다면, 후자는 FDI가 경제적 다이내미즘을 순환시키는(circulate or recycle)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小島의 가설이 관심을 끌었던 1960년대와 70년대에는 일본으로부터 ANIEs로 FDI의 이전과 자본재의 수출이 활발하였다. 그러나 渡辺가설이 등장하는 1980년대 중반이후에는 일본 뿐 아니라 ANIEs로부터 ASEAN 및 중국 등 역내 다른 국가들로의 FDI증대가 심화되고 있다. 나아가 ASEAN 및 중국도 아시아의 기타지역 뿐 아니라 ANIEs로의 자본 및 교역을 확장하고 있다(김종길 1999, 6).

과 아울러 이러한 다양한 견해와 특징들이 성장전략면에서 동일한 시공간에 중층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예컨대, 외국인투자의 역할은 논할 때 외국인투자 유출국과 유입국간의 자본-물자상의 상호의존관계가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정부나 제도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전략면에서 아주 좁게 본다면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정부(국가)주도하의 대외지향적 발전과정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에 대한 성격은 각 견해의 대표적인 특징만을 골라 보다 넓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고전파 모델에서 시사하듯, 실물부문의 성장은 공업화 초기에 투입물의 양적 팽창에 의해 가능하며,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나 생산성증대를 가져오는 추가적이며 부단한 노력을 요한다. 둘째, 발전국가 견해에서 보듯 발전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공업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나 이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낙후성과 관치금융 관행 등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면 오히려 '도덕적 해이' 및 '정실자본주의' 등 추후 성장에 병폐적인 요소들이 고착된다. 셋째, 외자주도 공업화 견해에서처럼 성장초기의 부족한 투자자금과 낮은 기술흡수능력 등의 문제점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하여 많은 부문 해소 또는 보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자계 기업들의 국내 토착기업 또는 금융과의 연계고리가 강하지 못하면 외자계 기업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기술흡수능력 향상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넷째, 대외지향적 모델에서 시사하듯, 역내 선진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 유입 및 자본재의 도입은 후발국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수출산업화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무역의 순기능은 바로 그 상호의존성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급속히 악화, 전염시키는 역기능으로 반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동아시아의 공업화와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넓은 의미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라고 볼 수 있다.

## (2)문제점

### 가. 실물부문 위주의 성장 및 그 과정에서의 금융부문의 낙후성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이 가지는 첫 번째의 문제점은 이것이 실물부문의 성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금융부문의 발전이 낙후된다는 점이다. 신고전파 견해에서 강조되는 투입-산출간의 생산함수 관계는 기본적으로 실물부문과 관련된 총생산의 증대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발전국가 견해에서 언급되는 공업화 및 산업정책도 실물부문의 성장에 관한 것이며, 은행중심의 간접적, 금융부문에 대한 언급은 그것이 산업화 및 공업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보조적 한

계를 지닌다. 외자주도 공업화의 견해에서도 FDI의 유입이 강조되지만 이는 FDI의 유입이 자본재 및 생산재의 도입을 가능케 하여 한 나라의 생산능력 증대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비슷하게 안행렬가설 및 자기순환가설을 중심으로<sup>5)</sup> 하는 대외적 측면에서의 동아시아모델 역시 기본적으로는 실물부문에서의 무역과 투자의 상호의존관계에 관한 것이다(Kim 1999). 이 모델에서 개도국의 공업화를 촉진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FDI는 실물부문에서 자본재와 중간재의 공급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취급된다. 다시 말하자면, 동아시아 모델에서는 한 나라 안에서의 실물부문과 금융부문과의 상호의존성 뿐 아니라 지역내 국가간 금융부문의 상호의존성도 생략이 된다.

여기서 아시아의 경제위기 직전에 아세안지역에 크게 회자하였던 '자유화'라는 구호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아시아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가속하기 위하여 무역부문의 자유화 뿐 아니라 금융 또는 자본부문의 자유화 역시 필요하다는 것이 그 주장의 골자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선진국이 자 지역 성장모델의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서조차 금융부문의 낙후성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여타 국가에서의 금융부문자유화는 이에 필요한 선행조건이 미비된 상황에서 추진된 졸속한 자유화였음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정부주도에 의한 공업화 및 성장전략이 아시아 모델의 핵심적 요소로 보는 견해에서는 정부역할의 약화 또는 와해에서 경제공황의 원인을 찾는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아시아 모델의 와해는 90년대 중반 금융부문의 자유화에 주로 기인한다. 금융자유화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규제완화와 해외투자자에 대한 자본시장의 개입으로 진행되었다. 즉, 금융부문이 낙후된 상태에서 불어닥친 금융자유화가 신용호름과 사적 투자에 대한 정부의 통제, 조정능력을 제거하였으며, 그 결과 과잉투자, 투기적 투자, 그리고 과도한 대외부채가 발생하고 이것이 현 위기사태를 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수행 외 1999: 29).

#### 나. 공급위주의 성장 메카니즘과 과잉공급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가지는 두 번째의 취약점은 공급증대에 관한 지나친 집착으로 발생하는 과잉공급의 문제이다. 수요측면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 가운데 공급증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흔히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이는 특히 성숙

5) 이 둘과는 약간 다른 구도하에서 Petri는 교류효과의 전파(contagion)가설을 주장하는 데, 이를 통해 그는 경제성장이 동아시아국가에 집중되어 온 이유를 지리적 근접성에서 찾는다: "동아시아의 성장은 상품, 투자, 기술, 염원, 지배구조에 관한 이해 등을 역내에서의 교류하고 집착함으로써 촉진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국가는 고립의 상태에서보다도 그룹의 상태에서 보다 성공적일 수 있었다"(Petri 1996: 31). 그는 동아시아국가들의 지리적 인접성이 1) 상대방 정책의 모방을 고무시키고, 2) 기술 및 기업전략의 모방을 촉진하고, 3) 국제무역을 신속히 하였으며, 4) 직접투자를 촉진시켰음을 지적한다.

기술 또는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의 과도한 생산이 국내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하여 해외시장의 여건변화에 의존될 때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과잉공급의 문제는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우에서 보다 심각하다. 아세안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아직도 존재하며, 특히 자국시장에서의 잠재적 흡수능력도 비교적 큰 실정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에서는 국내의 수요에 비하여 과도하게 커진 공급능력이 문제인 것이다. 예컨대,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의 과도한 생산능력일 것이다. 일반화된 공업제품의 과도한 생산능력이 국내에서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그 소비처를 찾지 못하면, 수출감소와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을 면치 못하며 경제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수출시장의 전체 경제규모에 대한 비중이 한국처럼 크지 않고 오히려 내수시장의 비중이 큰바, 그곳에서는 국내시장에서의 소비 및 투자심리의 위축이 무엇보다도 커다란 문제인 것이다.

동아시아의 높은 저축률은 공급능력증대 및 경제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소위 '기초적 여건'의 현실성 중 대표적인 덕목으로 취급된다. 그러나 이 역시 시공간 다른 상황하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컨대, 민간부문의 높은 저축률은 경기의 확장적 국면에서는 투자의 재원역할을 하지만 침체국면에서는 경기회복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키게 된다 (Kim 1999).

#### 다. 해외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및 전염효과

대외지향적 모델에서 묘사하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문제로 한 나라의 성장이 통제하기 어려운 해외수출 및 해외시장의 여건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의존성이 역내국이 아닌 역외국에 있음은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이 모델이 완전하려면 선진국은 FDI와 자본재를 공급하고 개도국은 같은 지역내의 선진국에 최종재를 수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개도국들은 그들의 수출을 역외인 미국이나 유럽시장에 더욱 중요하게 의존한다. 버나드(Bernard)와 라벤힐(Ravenhill)이 지적하듯 안행렬가설을 위주로 하는 동아시아 성장모델의 기본적인 제약점은 '무역의 삼각관계'(trade triangle), 즉, 역내선진국(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및 자본재수입과 역외국(미국 및 유럽)으로의 최종재수출이라는 삼각구조인 것이다 (Bernard et al. 1995: 203).

또한 대외지향적 모델에서 시사하는 상호의존성의 증대는 선진국에 의한 투자 및 자본재의 공급 그리고 시장의 제공이 개도국의 공업화를 가능케 하고, 이들의 공업화는 다시금 선진국의 성장세를 유지시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전파효과는 그 반대인 경기침체의 경우 똑 같은 상호의존성의 논리에 따라 부정적인 전염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의 아시아 경제위기에서 보듯

ASEAN국가에서 시작한 통화위기는 일본과 ANIEs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ASEAN의 일본과 ANIEs로부터의 자본재 및 중간재 수입을 감소시켰다. 이들의 경기하락은 다시금 ASEAN과 중국에의 FDI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다.

#### 라. 기술진보 및 흡수능력의 결여

동아시아국가들의 '기적적' 경제성장이 달성되며 이것이 인식되고 널리 알려지는 과정에서도 동아시아경제의 취약성 또는 동아시아 경제성장모델의 한계는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지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증대라기보다는 단순히 요소투입 증대에 의한 양적 팽창으로 이는 '기적'이 아니라 '신화'라는 크루그만의 비판이 있다 (Krugman 1994). 이러한 단순한 투입요소의 양적 팽창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바 그 이유는 수확체감의 법칙을 받아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후 둔화되기 때문이다. 투입요소의 양적 팽창에 기초한 이런 종류의 동아시아 성공담은, 특히 공업화가 이미 알려진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발전초기의 단계에서는 '기적'이라 부를 정도의 진귀한 현상은 아니다. 신화가 아닌 진정한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에컨대, 기술진보를 통한 생산성증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높은 단계로의 공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에의 대규모 투자, 사회간접자본의 형성, 그리고 차원이 높은 기술의 획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자본형성 그 자체가 험난할 뿐 아니라 자본투자로 인한 생산성증대 효과 역시 오랜 시일을 요하며 따라서 그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크다.

그러므로 기술진보를 고려치 않는 신고전파 모델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 즉 빈곤을 해결하거나 공업화를 시도하는 저발전의 단계에서는 그 설명력이 크나, 더 높은 단계로의 진입이나 전환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치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경제가 중진국 또는 그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고전파 모델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ceteris paribus) 기술, 구조,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의 질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달성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 많은 노력, 그리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시아 경제위기란 결국 '기적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동아시아 제국의 경제성장이 기실 저발전의 탈피에는 성공했지만 그 이상 단계로의 진입에서 겪고있는 시련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동북아 문제의 핵심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시의 적절히 적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낮아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수확체감의 법칙)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중국에서는 아직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다. 노동부문에서의 실업도 높은 수준이며, 자본투입증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실현도 그 여유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한국의 경우

에 기술진보는 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이러한 기술진보의 기여는 필연적으로 흡수능력의 기여를 초래한다. 이는 동북아 NICs 뿐 아니라 특히 아세안 등 제2세대 NICs의 경우에서 보다 심각한데, 이 때문에 이들에게 FDI를 통하여 유입된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이 이들의 산업생산능력제고에 이바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Bernard et al. 1999).

#### 마. 구조적, 제도적 취약성

특히 발전국가 모델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한계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제도적, 구조적 취약점을 들고 있다. 이 모델은 특히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대내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데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애초에 동아시아에서 외환,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었던 배경 뿐 아니라 그것이 경제위기로까지 악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국가에서의 구조적, 제도적 취약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낙후된 이들의 금융구조 및 기업지배 구조아래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가 만연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의 방만한 투자와 금융기관(특히, 은행)의 과도한 부실대출이 면밀한 사전준비, 심사, 및 감독이 없이 시행되었다는 지적이다. 실로 크루그만의 지적대로 한국 등 아시아의 경우 기업의 투자실패에 대해 정부가 금융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대부분 구제해주기 때문에 기업과 은행들은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투자와 대출을 해 주었음이(도덕적 해이) 사실이다(Krugman 1998). 또한 정부, 기업, 은행간의 밀접한 관계는 사업의 경제적 수익성보다는 정실과 뇌물수수에 의거해(연고자본주의) 대부와 투자를 결정해 금융위기를 초래한 부실대출과 채무누적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sup>6)</sup>

야마자와(Yamazawa) 또한 동아시아경제의 특징으로 흔히 언급되는 '기초적 조건의 건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주목한다: "모든 기초적 조건이 충실한 것은 아니다. 경제의 구조 및 성과에서 몇 가지의 주요 결

6) 그러나 이 두 이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설명하기에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적 견해를 보자. 첫째, 도덕적 해이와 연고자본주의가 아시아 모델의 내재적 특성이라면 한국경제는 지난 30년간 어떻게 급성장할 수 있었겠는가. 정부는 수시로 산업재편을 시도하여 실패 기업을 건전기업에 흡수, 통합시키고, 경영권도 은행으로 이전시켰다. 연고자본주의도 準내부조직으로 시장 메카니즘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출목표의 달성과 고도성장에 기여함. 연고주의 자체가 경제위기를 낳는 메카니즘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 없다. 둘째, 기업의 과잉투자과 은행의 과잉대출은(도덕적 해이나 연고주의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에 내재하는 일반적 현상임. 오히려, IMF가 한국 등 채무국의 경제에 개입하여 국제금융가들에게 원리금상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에 빠져 무모한 대외투자와 대외대부를 행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셋째,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아시아 모델의 특성은 공황 이전에 이미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反아시아모델의 견해는 실증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금융자유화로 정부가 신용의 흐름을 통제할 능력이 감소하였고, 기업이 은행의존보다는 점차로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의존하게 되었고, 정부가 사적 투자를 규제하거나 조정할 능력을 잃고 있었다(김수행 외 1999: 26-29).

합이 있었다. 그들의 금융시스템은 정부의 보호아래 非경쟁적으로 발전하였으며, 불건전한 정부-기업관계는 가부장적 산업정책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 개도국의 산업구조상의 문제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노동집약적 상품의 생산과 수출은 수입부품과 재료에 크게 의존되었기 때문에 이들 경제는 통화의 불안정과 혼한 경상수지적자에 취약하였다. 이러한 수입을 대체시키기 위한 공업고도화는 별 진전이 없었다. 그 이유는 자금의 부족보다는 기술흡수능력의 결여 및 숙련된 인력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결함 때문에 동아시아의 기적은 작금의 위기가 없었더라도 조만간 멈추었을 것이다”(Yamazawa 1998: 340).

### III.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과 아세안의 경제위기

이제 동아시아지역의 범위를 좁혀 아세안지역에서의 성장 메카니즘과 경제위기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성장 메카니즘이 아세안지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은 전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과 문제점들은 아세안의 경제성장과 경제위기의 설명에서도 대체로 그 설명력을 가진다고 보인다. 다만, 아세안의 경우 동북아(극동)와는 달리 자본형성을 포함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이 정부라기보다는 외자계 기업에 의하여 보다 중요하게 주도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 1. 대내적 모델

##### - 신고전파 견해

우선, 신고전파적 시각에서 시사되는 아세안에서의 경제위기는 실물부문의 성장세 둔화에서 설명된다. 즉, 노동 및 자본의 양적 팽창은 초기의 공업화를 빠른 속도로 달성시켰을지라도, 기술진보 및 흡수능력의 배양이 수반되지 못했던 이러한 성장은 그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 동안 동아시아에서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이루어졌던 수직적 국제분업체계가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아세안의 수출경쟁력은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한다. 그 주된 이유는 (1) 90년대 이후 일본의 버블붕괴 및 IT산업 등으로의 산업구조전환이 실패함으로써 발생한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 (2)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아세안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아세안은 1994년 중국

의 元화 평가절하,<sup>7)</sup> 급등하는 인건비 및 부동산 임대료 등으로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잃게되고 수출시장이 상실되면서 무역 및 경상적자가 누적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량의 단기성 외자가 도입되었던 바 이는 당시 국제금융시장의 공급여건이 좋았던 이유에도 기인한다. 문제는 이렇게 도입된 자본이 비생산적 자산에 투입되거나 장기성 인프라건설에 투입됨으로서 잠재적 외환수급상의 문제(mismatch)를 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고전파 모델의 견지에서 보는 아세안 경제위기의 핵심은 첫째, 민간위주의 시장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가운데 정부위주 또는 외자계 기업위주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났던 왜곡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 둘째, 기술진보, 흡수능력의 배양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시의 적절히 적응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낮아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수확체감의 법칙)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 - 발전국가 견해

다음으로 발전국가 견해의 입장에서 아세안 경제성장과 경제위기를 보자.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나 국가의 개입은 동북아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국가들이 그러했을 뿐 아니라, 아세안국가들의 경우에도 자본 및 노동의 요소시장, 생산 및 수출시장, 산업개발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아세안에서의 이러한 정부개입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처럼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외자유치 및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간접적인 개입이라 볼 수 있다. 우선 1980년대 중반 공업화정책의 기간을 종래의 수입대체형 또는 자원사용형 공업화정책으로부터 수출지향적 공업화정책으로 전환시켰던 것 자체가 동북아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부주도형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의 도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수출증대를 통한 공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에 정부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자본과 금융의 자유화를 통하여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이 아세안에서 오랫동안 성공적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세계적 추세에서 해외 기업 및 자본의 아세안에서의 역할은 점증하였으며 아세안 국가들의 자율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이다. 특히, 계속 증대되는 외자에 대한 수요(무역적자의 보전 및 인프라개선 등)와 함께 자본시장자유화에 대한 외부적 압력으로 이들의 자본, 외환시장은 급격한 개방으로 선회하였으며,<sup>8)</sup>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발전국가적 통제는

7) 중국의 元화는 1994년 1월 1일부터 과거의 5.8元/1\$에서 8.45元/1\$로 45.7% 평가절하되었다. 일본의 엔화 역시 95년 4월의 83.6엔/1\$에서 96년 말에는 113.7엔/1\$로 36% 절하된 것이다. 따라서 ANIEs와 아세안은 각각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중국에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아세안 국가들의 대외 통제능력이 잠식되는 과정에서 투기성 단기 해외자금의 대량유입은 국제투기자본의 주요한 공격수단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아세안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제공한 셈이다.

#### - 외자주도공업화 견해

동북아의 공업화와 차별하여 아세안의 경제성장 패턴을 잘 대변하는 것은 외자주도 공업화 모델이다. 동북아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통해 국내 대기업(한국의 경우) 또는 중소기업(대만의 경우) 등 국내기업의 주도로 공업화가 수행되었는데 반하여 아세안에서는 외자계 기업이 이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을 통하여 아세안이 필요로 했던 자금과 기술을 도입하고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아세안국가 중 위기를 회피하지 못하고 타격을 입은 국가의 경우에는 외자계기업과 현지기업간의 산업구조상의 연계관계가 약하거나,<sup>9)</sup> 현지금융기관이 낙후되어 있어서 해외로부터 유입된 대량의 자금이 생산적이지 못한 부문에 사용되거나, 일부 제조업에 과잉설비투자를 야기함으로써<sup>10)</sup> 사회 전체의 투자효율을 낮춘 것이다. 이는 결국 국내버블의 감소보다 빠른 수요의 감퇴, 투자효율의 악화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 등을 초래함으로써 통화 및 경제위기를 발생시킨 것이다. 아세안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구조라 할 수 있는 공업화와 금융부문의 괴리가 여기에서도 입증된다고 볼 수 있다.

## 2. 대외적 모델

투자-무역의 호순환 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동아시아 성장의 대외적 모델이 ANIEs의 공업화 뿐 아니라 아세안의 공업화에도 큰 기여를 했음은 이미 언급되었다. 실로 이러한 메카니즘은 아시아경제위기 직전까지도 후발 아세안국가에게

8) 몽테(Montes)는 이렇듯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가 두 개의 자유화 - 즉, 국내 금융시스템의 자유화 및 자본계정의 자유화-와 함께 초래되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의 자유화는 국내의 금융시스템에 크나큰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 --- 여신의 위험성은 오히려 계산되지 못하였으며, 이자(소득)의 위험성에도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았다. 두 번째의 자유화는 (개도국에서 국내 이자율은 국제이자율보다 일반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자본계정의 개방으로 개도국의 국내금융시스템은 중개 또는 조정제(intermediation) 필요한 저비용 자금을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국내 금융기관들 사이의 경쟁을 부추겼다"(Montes 1998: 56-57).

9) 예컨대, 외국기업이 수출가공지기에 진출하여 해외로부터 수입된 부품을 조립하여 전량 수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 타일랜드에서 일부 일본계 기업에 의한 수요예측의 실패와 과잉설비투자가 전형적인 경우이다(奥田 2000: 49).

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즉, 1990년대 중반에는 아세안국가 중 태일  
랜드, 말레이시아 등이 인근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무역 및 투자관계를 강화시키  
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나르는 기러기떼에 더 많은 무리들이 가세하기 시작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과 아세안의 경제위기에는 어떠  
한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러한 투자-무역의 상호의존성 심화가 한 나라  
에서의 경제문제를 타국에 전염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역내 모든 국가에 확산시  
킬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자면, 한나라(예컨대, 일본)의 경기침체로 수입수  
요가 감소하면 이는 수출국(예컨대, 아세안 국가)의 외화수입 및 소득(GDP)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아세안의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일  
본의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아세안의 경제위기는 아세안의  
모든 국가들에게 직면되었던 문제가 아니며, 더더욱 경제위기가 동아시아의 성  
장 메카니즘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덕적 해이 및 취약한 금융부문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  
나 모든 아세안 국가들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부 경제  
는 피상적인 타격만 입고 아직도 전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보다는 이  
는 실물부문의 급격한 성장을 강조하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서 금융부문이  
낙후되거나 간과되는 데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그러나 본질이 그렇다 하더라도  
동아시아의 통화위기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전파되는 메카니즘을 보면 무  
역 및 투자의 상호의존성을 통하여 달성된 경제성장의 호순환은 경우에 따라서  
는 그 반대인 악순환의 방향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그러한 변화가  
'자기순환적' 역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역외로부터의 투기적 공격에 의해 촉발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sup>11)</sup> 여하튼, 아세안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동아시아 성  
장 메카니즘과 관계가 있던 없던, 아세안의 경제위기는 같은 메카니즘을 통하여  
급속히 전파된 것이다.

11) 아시아 위기를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이 그간 많이 달라졌다. "당초에는 위기의 주원인을 아시아  
국가들의 불투명한 제도, 관행과 취약한 미시, 거시적 기본여건에만 돌렸었다. 이제 국제 금융시  
장이 파잉반응을 보일 수 있고 선진국 자금 공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컸으며 국제 투기자본이  
세계적으로 교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리하여 이 외생적인 요인들도 아시  
아위기의 큰 요인이라는 데에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안국신 1999: 87).

## IV. 아세안의 구조조정과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

### 1. 구조조정의 성격과 문제점

#### (1) 성격

아세안경제가 금융위기를 맞게 된 것은 물론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까닭이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기술개발로 국제자본이 순식간 예측할 수 없게 이동할 수 있는 가운데 아세안에 투자했던 자본이 이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갑자기 떠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데 있다. 또 대내적 요인으로는 이들 경제의 금융부문의 취약성, 기업구조 및 재무구조의 불투명성과 취약성, 그리고 경제운용과 금융감독의 미숙 등 경제전체의 관리부실로 인해 외국투자자의 신뢰를 잃은 데 있다. 유동성위기는 금융위기로, 그리고 곧 전반적인 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이는 아세안경제가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와 경제구조면에서의 취약점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 및 통화위기가 발발하자 IMF는 긴급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이들에게 (1)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 (2) 금융, 기업, 노동부문에서의 구조조정, (3) 무역 및 자본계정에서의 자유화 가속 등을 요구한 것이다(Lane 1999: 18-19). 위기발발 초반 타격이 심했던 아세안국가들은 거시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구제금융을 제공한 IMF의 권유에 의하여) 환율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한 고금리정책을 실시하였다.<sup>12)</sup>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고금리정책이 애초 기대 하였던 환율과 통화의 안정기여 여부와는 별도로 이로 인하여 이들 국가의 국내 경기가 필요 이상으로 침체되었다.<sup>13)</sup> 고금리정책 이외에도 IMF는 이들 국가에

12) IMF의 구제금융제를 거절한 말레이시아에서도 외환위기의 초기 단계에 금리도 사상 가장 높은 20%수준으로 인상하는 등 사실상 IMF형 안정화 및 긴축정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다. 특히 IMF가 국제표준으로 제시하는 부실금융기관과 기업의 퇴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기준의 강화, 재무정보의 공개 등을 실시하여 구조조정정책을(Virtual IMF policy) 이행하였다는 점을 주목하여야 한다(안충영 2000: 117).

13) 이에 대한 UNCTAD의 견해는 보다 직설적이다: “각국에서의 위기는 그 자신의 특징을 가지긴 하였으나 극단적인 붕괴와 회복은 대체로 오도된 정책에 기인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초기의 정책반응은 필요 이상으로 후심하였으며 긴축적 금융정책이 빠른 시일내에 통화를 안정시킴으로써 투자를 선도해 경기회복을 낼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이었다. 금융긴축은 투기적 공격에 의하여 촉발된 debt deflation process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위기를 악화시키고 산출과 고용을 침체시켰다. 금리인상의 결과로 통화가 안정된 것도 아니었다. 통화안정이라는 결과는 오히려 수입의 대폭적 감소에 따른 외환보유고의 축적, 재무재조정으로 인한 외국으로부터의 채무상환요구의 감소 또는 자본통제와 같은 비정통적인 조치의 결과였다. 실로 금리인상은 통화가치의 하락보다도 금융 및 기업부문을 혼란시키는 훨씬 손상을 입혔던 것으로 드러났다”(UNCTAD 2000: VI).

서의 경제구조개혁을 요구한 것이다. 즉, 그 필요성이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도래 이전에는 그 실천이 지지부진하였던 이들 국가에서의 경제구조 개혁은 IMF라는 외부적 압력이 가해지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금융, 공공 및 노동분야에서의 구조조정작업이 시도된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은 그 성격에 있어서 물리적 측면에서의 경제구조의 조정 이외에 경제주체들의 사고방식과 행태의 근본적인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역시 주목해야 한다. 즉, 1980년대 중반이후 수입대체로부터 탈피하여 수출촉진을 통한 외향적 공업화를 달성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사회개발을 꾀하는 것이 첫 번째 경제개혁이라면, 이번 두 번째의 개혁(구조조정)에서는 정부를 포함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의 이러한 개혁은 경제구조나 제도 및 재원의 투입과 같은 하드웨어(hardware) 측면에서는 그동안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도 이루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사고방식이나 행태, 관행의 변경 같은 소프트웨어(software) 측면에서는 아직 확실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측면에 보다 큰 강조와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2) 문제점

구조조정의 진행 또는 그 효과와는 상관없이 이들 아세안의 경제는 위기발발 1년여인 1998년 4분기 이후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99년 이후 성장률은 다시금 플러스로 전환하였으며 무역수지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Appendix-1).<sup>14)</sup> 외환보유고도 그간 증대하였으며 1999년 말 현재 아세안 제국의 외채규모는 1997년 말에 비해 평균 35%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실물부문에 관한 거시 지표상의 개선은 현저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물부문의 회복과는 달리 금융부문의 안정성은 아직 요원하다. 은행의 이윤성에 나쁜 영향을 주는 불량채권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으며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경우 심각하다(표-1). 자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차대조표는 취약한 상태를 보인다. 즉, 위기 4국(말레이시아, 태일랜드, 인도네시아, 한국)에서 NPL은 현재 대손금의 약 4배에 달한다. 은행자산에 대한 자본금의 부족도 말레이시아(1.7%)는 적으나 인도네시아(18%)는 심하며, 한국(4%)과 태국은(8.1%)은 그 중간에 위치한다(Kawai 2000: 7).

14) 그러나 이는 수출세의 뚜렷한 증가없이 주로 수입감소에 의해 달성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적 성장세를 낙관만 할 수 없다.

(표-1) 경제위기국의 부실채권(NPLs)비율

	1997 12월	1998 12월	1999 12월	2000 6월
인도네시아 (IBRA 제외)	- 9.3	- 19.8	- -	58.7 39.7
한국	6.0	7.4	8.3	12.2
말레이시아 (Danaharta 제외)	6.0 -	22.6 18.9	23.6 16.7	23.2 -
필리핀	4.7	10.4	12.5	14.6
타일랜드 (AMC 제외)	- -	45.0 45.0	41.5 38.9	34.8 32.0

자료: Kawai(2000, 6)

주: IBRA: Indonesian Bank Restructuring Agency.  
Danaharta: Malaysian asset management company  
AMC: Asset Management Company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공공 부채의 증대이며(표-2), 이미 투입된 대규모의 공적자금으로 재정적자의 문제는 경계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뒤따르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에 앞으로 더 많은 자금수요가 있으리라 예상되므로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이 특히 금융부문에 투입되었을 때 누가 그 구조조정의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원칙이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구조조정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증대라 할 수 있다. 구조개혁의 기본적인 방향이 정부개입의 축소와 시장질서의 구축임을 상기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은 오히려 그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라는 의구심과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컨대,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통하여 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부문에 대한 개입과 간여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부문의 도덕적 해이문제가 경제위기의 원인이었다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개선되고 있지 않다.<sup>15)</sup> 비슷하게,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15) IMF 지원을 받았던 경제위기국에서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에서도 신뢰도를 회복하고 은행의 대여자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금자와 채권자에 대한 무제한 보증제도가 사용되었다. 그런 일이

을 위한 제도적 개혁도 민간부문의 필요성에 근거한 자발적인 개혁이라기보다는 정부의 독단과 전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2) 동아시아국가들의 총 공공부채  
(GDP에 대한 비율)

	1996	1997	1998	1999
인도네시아	24.5	106.4	103.4	96.0
금융부문 구조조정	-	39.9	55.3	60.1
말레이시아	47.7	49.0	53.5	56.4
필리핀	68.2	66.4	72.9	74.4
타일랜드	14.5	31.1	49.5	56.3
금융부문 구조조정	1.2	13.8	28.9	31.0
한국	8.8	12.7	24.4	29.6
금융부문 구조조정	-	1.5	8.5	12.9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0: 73.

마지막으로 구조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참여주체간의 협력결여를 들 수 있다. 즉, 정부, 기업, 금융, 노동 등 경제부문간의 이해조정이 각 주체의 기득권 고수 또는 우월한 위치확보를 위한 경쟁관계 등의 이유로 좀처럼 진전되고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과거의 성장과정 중에 형성된 기업과 노동과의 관계, 기업과 금융과의 관계,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가 고착화되어 이러한 관계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구조조정이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제주체간의 협력체제 미비가 앞에서 언급된 정부의 개입 또는 정부조정에 대한 의존성을 보다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 2. 구조조정이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 주는 시사점

정부의 주도아래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주요 수단으로 삼는 소위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당위성은 성장초기의 단계, 즉 공업화를 시도하고 절대빈곤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그 당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활동이 정제되고, 자본시장 또는 금융시장이 낙후된 상황에서 정부의 강력한 공

일어날 경우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과 이에 수반되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부는 은행시스템의 붕괴보다는 이러한 보증제도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Lindgren et al. 1999: 5).

업화 추진력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공업화가 대외 지향적 수출증대로 이어진다면 생산물에 대한 수요부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은 필요한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을 가능케 함으로써 공업화를 내생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동아시아 성장모델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중진국 이상의 공업화를 달성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을 수반하든 아니 하든 경제가 기초적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 낙후된 경제의 질적, 내적 구조에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없었다라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당연히 대두되었을 것이며, 실제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1997년 이전부터 그 나름대로의 구조조정을 향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다분히 목가적이었으며, 경제위기에 봉착해서야 구조조정은 절대절명의 필요성이 된 것이다. 경제위기를 '위장된 축복'(disguised blessing)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범주 안에서 설명이 되는 아시아국가들이 모두 경제위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한국이외의 ANIEs 그리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1997년 통화위기 직후 약간의 동요가 있었지만 큰 타격은 받지 않고 과거와 비슷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시아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내재적, 구조적 취약점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당한 국가들의 외환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운영상의 실패(예컨대, 높은 외채의 비중, 누적되는 무역적자, 외환보유고의 고갈 및 부적절한 외환정책, 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구조적 취약점은 어느 나라마다 존재하며, 다만 그 종류와 정도만 다를 뿐이다. 사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은 외환위기의 타격을 받지 않았던 다른 아시아제국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이 경제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보다 사려 깊은 경제정책의 운영만이 아니라 구조적 취약성이 그만큼 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어떤 단계의 경제발전에도 있을 수 있으며, 정부개입의 왜곡도가 클수록(발전국가 모델), 외자계 기업의 현지산업과의 연계성이 낮을수록(외자주도공업화 모델) 그 필요성은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를 맞았던 나라에서의 구조조정과정을 보면 원래 의도하는 목적중 하나인 민간에 의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또는 정부개입의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정부의 개입 없이는 구조조정이 전혀 진전되지 못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구조조정의 실패로 보기보다는 정부의 역할 역시

경제성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해야 된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주된 특징 중 하나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다. 그러나 성장 초기의 단계는 정부의 역할이 공업화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라면, 성장이 어느 정도 달성된 뒤에는 시장의 기능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피하는 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정부개입으로 인한 정부-기업-금융의 삼각고리는 공업화과정 중 더욱 강하게 형성되어 이러한 고리를 해체시키는 과정에서의 저항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둘째, 시장의 기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정부의 개입이 발전초기 단계에서 성장과 공업화에 더욱 효과적인 것이라면, 효율성의 개선을 통한 성장세의 유지 그리고 공평성의 개선 등이 필요한 발전중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이의 달성을 시장경제의 성숙에서 찾는 수동적인 방법보다 다시금 그러나 변화된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찾는 능동적인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아세안국가들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는 자국산업과 후방효과가 결여된 외자계 기업에의 과도한 의존도, 그리고 해외 수출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재화 및 자본의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경제는 국내시장 뿐 아니라 변덕스러운 해외시장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적 여건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예컨대, 선진국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및 선진국으로부터의 FDI 유입감소, 등) 요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악화와 같은 내부여건에 문제가 발생하면 성장 메카니즘에 이상이 생기고 따라서 資本財수입을 위한 외화의 획득 뿐 아니라 수출확대를 통한 생산 및 소득의 증대도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 자본, 기술, 수출시장에서의 이러한 외부의존성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아세안 내에서의 국내산업육성 및 기술의 흡수능력배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기업, 금융, 공공부문에서의 구조조정은 과거처럼 해외자본과 기업의 유입·유치 중심에서 이들의 보다 효과적 이용 그리고 국내산업과 기술로의 연계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3. 아세안에서의 향후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 대한 전망

이제 이 논문에서 처음 제기하였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시도해 보자.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는 아세안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전역의 경제성장을 큰 무리없이 설명한다고 여겨졌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1997년의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그 설명력을 유지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desirability)이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성격은 과거와는 달리 많은 변화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 앞서서도 정리하였듯 이 논문에서 말하는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의 제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신고전파 견해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97년의 경제위기 이전 10여년 간에 걸친 아세안의 경제성장은 기본적으로는 단기적인 것으로 이는 투입요소의 양적 팽창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 경제성장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구조적·제도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이는 보다 긴 시간을 요할 뿐 아니라 큰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아세안의 경제위기란 이렇게 어느 경제든 장기적 성장경로로 가는 과정 중에 치루는 비용이며, 이 비용이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지불되는 대부분의 경우와는 달리 아세안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불되었던 경우라 볼 수 있다. 장기적 성장경로로의 진입이 보다 일찍 전개되었던 ANIEs의 경우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했던 한국은 물론 그 외의 나라에서도 비록 타격이 그리 심하지 않았지만 위기가 도래했으며,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10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음은 아직도 이 비용을 치루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발전국가 견해에서 강조하는 정부의 역할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아세안의 경우는 아직도 산업구조 고도화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 또한 아세안국가들이 과거 외자주도공업화 과정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던 기술흡수능력의 부족이나 인적자본 육성의 미진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북아에서의 발전국가모델이 제한적이거나 성공적으로 이끌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국가개입 모델의 장점과 아울러 한국 등 동북아의 실패도 교훈삼아 기업구조 및 금융구조의 개혁을 통하여 아세안정부는 산업구조, 공업구조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개입이나 역할은 아세안의 초기 공업화 과정에서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또한 정부나 국가의 역할은 투입요소시장 및 산출물시장에서의 직접적 개입과 같은 것이 아니라 (1) 장기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진보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2) 시장에서 경쟁의 원칙이 서도록 룰을 정하거나 감독하는 기능, (3) 효율성 뿐 아니라 공평성의 증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 등 간접적 역할이 중심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sup>16)</sup>

아세안에서 대표적으로 시현되었던 외자주도공업화의 장점도 계속 유지될 필요성이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제적 표준으로 대변되는 작금의 기업경영질서는 아무래도 외자계 기업에 의하여 아세안에 도입, 정착되는 것이 가장 효과

16) 신고전파 견해가 시장친화적(market-friendly) 접근이라면 이러한 측면의 발전국가 견해는 시장양양적(market-enhancing) 견해라 볼 수 있다(Aoki, Mrudock et al. 1996, 제 1장을 참조할 것).

적일 것이다. 또한 아세안은 이들 외자계 기업들을 통하여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선진국의 무역 및 투자정책, 기술 및 자금의 원천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목격하였듯 외자계 기업에 의한 해외자금의 유입이 자산가격의 버블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외자계 기업이 단순히 봉쇄수출특구의 역할만 함으로써 토착 기업 및 금융과의 연계(linkage)가 약하고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및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미약하도록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지향적 모델 역시 아직도 그 유효성을 가진다. FDI-무역의 상호의존성 심화가 경제위기 이전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되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 물론 바로 그러한 메카니즘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위기의 전염효과를 확산, 심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메카니즘의 당위성이 없는 것도 아니며, 이러한 메카니즘이 아세안의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금 활성화되어서는 안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타격을 입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제국에서 경제구조의 건실화를 위한 구조조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중요하며 향후 아세안에서의 또 다른 경제위기 발생시 이에 대처하는 국제간 협력체제의 구축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 선발 아세안의 경제회복과 함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인접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후발 아세안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Appendix-2), (Appendix-3). 실로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은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하여 그 취약점이 개선되고 보완됨으로써 더욱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17)</sup>

그러나 이렇게 수정된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메카니즘의 향후 아세안지역에의 적용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약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외지향적 성장을 추구해온 아세안의 경제는 무엇보다도 구미선진국과 일본에서의 힘찬 경제성장세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동남아의 비관적인 현실은 최대시장인 미국의 경기둔화이다.<sup>18)</sup> 비슷하게, 90년대 일본산업의 '공동화

17)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견해도 있다. 尹春志(1999), 進藤榮一(1999) 및 Bernard et al.(1995)를 참조할 것). 즉, 기러기행렬가설이 일본의 공업화로부터 아시아 NICs의 공업화를 설명하는데도 무리가 있거니와 더욱 동남아시아의 공업화를 설명하는 데로 확장함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다: "동남아 제조업의 많은 부분에서 외국계 기업의 지배적 위치 그리고 이들 기업의 외국 기술과 부품에 대한 계속되는 의존성 때문에 안행렬가설의 동남아 적용이 적절한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분명히 공업화가 발생하는 지역적, 세계적, 기술적 여건이 무시된다 할 지라도 이 지역에서의 제조업 발달 패턴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수입체제의 기초가 서 있지 않은 수출지향적 제조업, 현지 부품공급자와의 연계 부족, 등- 일본, 한국, 대만 등이 경험한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Bernard et al. 1995: 199)

18) "동남아 IT관련 수출의 50%가까이 소화해 온 미국시장이 수축되면, 싱가포르산 소프트웨어, 말

'(hollowing out)와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the lost decade)는 앞으로도 과거와 같이 일본으로부터 아세안으로의 대규모 FDI 유입이 반복될 가능성에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다른 한편으로 아세안 역내 국가들간의 수출구조의 수렴현상은 가격경쟁을 가열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중국과 인도와 같은 새로운 경쟁국의 진입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욱이 대외지향적 성장 메카니즘의 핵심인 무역과 금융의 상호의존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내성장은 무역규모의 신장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보장하는 공식적, 제도적 형태를 요한다.<sup>19)</sup>

둘째, 많은 개도국들이 아세안과 비슷한 발전전략을 추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즉, 선진국의 보호무역성향이 강화되는 가운데 많은 기타 개도국들이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강화할 때 이들 사이의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UNCTAD가 지적하듯, "보다 많은 개도국이 외향적 발전전략을 채택 하면서 무역충격에 대한 취약점과 '구성'의 오류'의 위험성은 증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의 여건은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만이 외향적인 전략을 추구하고 공업국시장에 쉽게 접근하고(다른 제3세계생산자 또는 수입선진국들로부터 중대한 도전을 받지 않았던) 60년대 70년대의 상황과 판이하게 다르다. 실제로 선진공업국들은 냉전구도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이들에 의한 시장침투에 상당한 관용을 보였다. --- 빠르고 총괄적(inclusive)인 성장이 외부 무역과 금융상의 충격에 대해 취약성이 크다는 관점에서 볼 때, 역내국가들에게 외국의 시장과 자원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는 보다 균형잡힌 장기성장경로가 바람직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1세대 NIEs와 2세대 NIEs의 여건은 다르다"(UNCTAD 2000: 70).

셋째, 아세안경제는 그 자신의 회복 뿐 아니라 중국의 경제성장으로부터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ANIEs의 뒤를 따르는 아세안국가들과 일부 산업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기타 다른 산업분야에서는 조금 뒤늦게 공업화와 경제 성장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아세안제국의 대부분이 경제위기로 타격을 받은 데 반하여 중국은 이를 비켜갈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및 아세안 등 인접 아시아국가에서의 경제위기는 중국에 많은 교훈을 주면서 중국은 자국 경제의 문제

레이시아산 하드디스크, 대만산 컴퓨터는 갈 곳이 없어진다."(『조선일보』 01/1/9, 18)

19) 동남아는 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의 출범으로 역내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다. 인구 5억의 단일시장을 지향하는 AFTA는 2002년 말까지 동남아의 모든 역내관세를 5% 이내로 (5%이내의 상품이 이미 전체의 85%이며, 2001년 말까지는 90%수준이 될 것이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동북아와의 제휴도 모색하고 있다. 즉, ASEAN 과 한, 중, 일 3국 수뇌가 참석한 2000. 11월 Manila에서의 3차 ASEAN Informal Summit에서 아세안은 "아세안+3" 자유무역지대의 추진을 천명한 바 있다.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는 경제위기 이후 일본이 제시한 아시아 통화기금 (AMF: Asia Monetary Fund)의 창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정책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진지하게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지속적 발전과 경제개혁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특히 아직은 경쟁상대인 선발 아세안의 향후 경제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컨대, 올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중국은 저임금을 무기로 미국시장에서 동남아 상품을 몰아내고 역내 외국인투자(FDI)도 크게 독점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연안지역으로부터 내륙지역으로의 성장세를 확대하는 가운데 인접 인도차이나 3국이나 미얀마로의 경제적 진출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것이 중국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진출은 향후 후발 아세안의 경제진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아세안지역에 한편으로는 경쟁적인 다른 한편으로는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하면서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 새로운 국면을 제공할 것이다.

넷째, 정치적인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경향이 있다. 구조조정의 지연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한 근로자들의 좌절감은 정치권 부패에 크게 저항하면서 동남아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상의 불안정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인도네시아에서는 와히드 대통령에 대한 부패스캔들, 종교분쟁, (인종)분리주의 운동으로 경제회복이 아세안 중 가장 지지부진하다. 타일랜드에서도 최근의 총선결과에 대한 시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필리핀에서는 부패혐의로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날 때까지 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정치가 비교적 안정적인 말레이시아에서조차 많은 사람들이 마하티르 수상의 장기집권에 염증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남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안겨주며 경제회복에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있다.

## V. 결론

우리는 이 논문에서 1997년 아시아의 외환, 통화위기가 발발하기 전 아세안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전역의 경제성장을 비교적 무리 없이 설명한다고 여겼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경제위기와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그 설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를 대내적 모델 -신고전파, 발전국가, 외자주도공업화 견해-과 대외적 모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우리는 또한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과 아시아 경제위기와 의 연관관계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부수적 교훈의 하나는, UNCTAD의 지적처럼, 금융(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보다 외부적인 요인에 있음으로 외부의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내향적인 성장요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아세안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경제구조조정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것이 향후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리가 도출한 결론은 한마디로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향후 아세안의 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데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메카니즘은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는 그 성격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금융위기라는 것이 미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의 붐(경기호황)의 필연적 결과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골드스미스(Goldsmith)의 말처럼 그것은 자본주의의 '유아병'이지 노년기의 특징적 질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는 아이들이 홍역이나 수두에 한번 걸리고 나면 더 이상 같은 질환으로부터 면역된다고 더욱 확대해 볼 수 있다(Goldsmith 1982: 42, Booth, 2000, 41에서 재인용). 1997-99년의 위기에서 비교적 타격을 입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하여 아세안국가들이 장래에 다시금 발생할 수 있는 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며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이들이 1997년의 위기로부터 얼마만큼 큰 교훈을 얻었으며, 이들 경제가 그들의 감사, 규제 및 법적 기구들을 얼마나 잘 개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는 나아가 동남아 ASEAN과 동북아 NIEs와의 향후 성장격차 뿐 아니라 ASEAN내에서의 국가간 성장격차를 결정할 것이다.

과거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을 설명하였던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이 시공간에 달라진 경제성장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성장모델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모델에서는 경제성장에서의 시장의 역할이 정부의 역할에 못지 않게 균형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개입주의적 국가의 폐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경제문제에 간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소위 신자유주의 논리 역시 부적절하다. 그들은 구미 자본주의 경제가 오랜 기간에 걸쳐 효율성과 공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던 정부의 역할을 외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의 역할이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급변하는 환경에 걸맞게 국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느냐, 또 거기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국가 조직 및 정부제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이다"(윤영관 1999: 432).

아세안지역에서의 동아시아의 성장 메카니즘은 정부의 역할을 바탕으로 자금

과 물자의 대외지향적 관계를 통하여 공업화 및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메카니즘이다. 이러한 성장 메카니즘의 성격이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다. 다만 과거에는 자본 및 노동의 요소시장 뿐 아니라 수출 및 내수상품시장에서 정부의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미는 성장의 매니저 역할이 강조되었다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부문간 이해를 조정하고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심판의 역할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주변의 세계적 경제여건은 민간경제 자체가 그 자신의 힘으로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시대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서 정부의 역할도 시장기능의 작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감독기능을 철저히 하는 등, 심판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동북아 NIEs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업화 및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독려해서 그것이 달성되는, 정부가 매니저의 역할을 하는 단계는 이미 지나 이제는 심판의 역할이 강조되는 단계라고 보인다. 그러나 ASEAN의 경우에는 아직도 정부의 매니저 역할이 남아있다. 공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사회 인프라의 구축에 꾸준하고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경제위기가 일깨워준 교훈중의 하나는 정부의 심판 역할 역시 장기적, 안정적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며 이것이 결여되었을 경우 단기적 공업화나 성장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세안에서 경제구조조정이 결실을 맺게 되면서 그리고 새롭게 변모된 정부역할의 활성화를 통하여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은 한층 더 강력하게 작동될 것이다.

**주요 용어** : 동아시아 성장 메카니즘, 구조조정, 신고전파, 발전국가, 외자주도

## 참고문헌

- 김상조, 1999. "IMF 관리체제의 금융구조조정". 변형운 외 9인. 『IMF관리후 한국의 경제정책』, 91-144. 서經硏연구총서 VI, 도서출판 새날.
- 김수행·조복현, 1999. "한국 경제공황의 새로운 해석과 경제개혁 방향". 변형운 외 9인. 『IMF관리후 한국의 경제정책』, 23-49. 서經硏연구총서 VI, 도서출판 새날.

- 김종길. 1999. "동아시아 발전과정에서의 중국의 경제성장". 『경상논집』, 13집 1호, 1-36,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 안국신. 1999. "'국민의 정부' 1년, 경제정책의 평가와 과제". 변형운 외 9인. 『IMF관리후 한국의 경제정책』, 51-90 서經연구원총서 VI, 도서출판 새날.
- 안충영. 2000. 21세기 동아시아의 경제발전모델. 한국경제연구원센터 (대한상공회의소).
- 윤영관. 1999. 7. "동아시아 모델과 세계자본주의 - 시장, 국가, 제도의 관점에서". (백광일·윤영관 편.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 411-436.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근·한동훈. 2000. 3. "중국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건너뛰는가?" 『중국의 기업과 경제』, 80-115. 21세기북스.
- Akamatsu, K. 1962. "A Historical Pattern of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The Developing Economies*, 1-25.
- Aoki, Masahiko, Kevin Murdock and Masahiro Okuno-Fujiwara. 1996. "Beyond the East Asian Miracle: Introducing the Market Enhancing View." in Masahiro Aoki, Hyung-Ki Kim, and Masahiro Okuno-Fujiwara(eds.).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Economic Development: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1-37. Oxford University Press.
- Bernard, Mitchell and John Ravenhill. 1995. "Beyond Product Cycles and Flying Geese: Regionalization, Hierarchy,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 Asia." *World Politics*, 47, 171-209.
- Booth, Anne. 2000. "Southeast Asia: Towards a Sustained Recovery?" *Southeast Asian Affairs 2000*, 25-4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Chen, E.K.Y. 1995.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in East Asia*, Tokyo: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Conference Paper.
- Ezaki, Mitsuo. 1995. "Growth and Structural Changes in Asian Countries." *Asian Economic Journal*, Vol. 9, No. 21, 113-135.
- Goldsmith, Raymond. 1982. "Comment on Hyman Minsky, The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Capitalist Processes and the Behaviour of the Economy." in Charles P. Kindleberger and Jean-Pierre Laffargue(eds.). *Financial Crises: Theory, History, and Poli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MF. 2000. *World Economic Outlook*.
- Kawai, Masahiro. 2000. *East Asia's Recovery: Gathering Force (An Update)*. Tokyo: The World Bank.
- Kim, Jong-Kil. 1999. "Economic Rel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mplications of Korean Economic Crisis for China." *The Southeast Asian Review*, 249-285.
- Kojima, Kiyoshi. 1973. "Re-organization of North-South Trade: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 for the 1970s."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13(2), 1-28.
- Krugman, Paul. 1994. "The Myth of Asia's Miracle." *Foreign Affairs*, Vol. 73, No. 6, 62-78.
- \_\_\_\_\_. 1998. 1. "What Happened to Asia?" MIT Dept. of Economics.  
<http://web.mit.edu/krugman/www/DISINTER.html>
- Lane, Timothy. 1999. "Program Design," in Timothy Lane, Atish Ghosh, Javier Hamann, Steven Phillips, Marianne Schulze-Ghattas, and Tsidi Tsikata(eds.). *IMF-Supported Programs in Indonesia, Korea, and Thailand: A Preliminary Assessment*, 18-19.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Lindgren, Carl-Johan et al.(eds.). 1999. *Financial Sector Crisis and Restructuring: Lessons from Asia*. Occasional Paper 188.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 Montes, Manuel F. 1998. "Banking on Contagion: The Southeast Asian Currency Crisis," in C. H. Kwan, Donna Vandenbrink and Chia Siow Yue(eds.). *Coping with Capital Flows in East Asia*, 54-78. Nomura Research Institute and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Petri, Peter A. 1996. "The Lessons of East Asian Success: A Premier for Transitional Economies." in Seiji Naya and Joseph L. Tan(eds.). *Asian Transitional Economies: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Reform and Transformation*, 26-55. Singapore: ISEAS.
- Salih, Kamal. 1992. "The Changing Economic Position of Japan in the Pacific and Its Implications for ASEAN and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 in Chia Siow-Yue and Cheng Bifan(eds.). *ASEAN-China Economic Relations: In the Context of Pacific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29-44. Singapore: ISEAS.

Takeuchi, Junko. 1999.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n Sueo Sekiguchi and Makakito Noda(eds.). *Road to ASEAN-10, Japanese Perspectives on Economic Integration*, 98-132.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and Japan Center for International Exchang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UNCTAD). 2000. *Trade and Development Report, 2000*, United Nations.

Vernon, Raymond. 1966.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80, 190-207.

Watanabe, Toshio. 1991. *Transforming Asia*, Koubun-to.

World Bank. 1993. *The East Asian Miracle*. Oxford University Press.

Yamazawa, I. et al. 1993. "Dynamic Interdependence among the Asia-Pacific Economies." *Kezai Bunseki* (Economic Analysis), Vol. 129.

Yamazawa, I. 1998. "The Asian Economic Crisis and Japan." *The Developing Economies*, Vol. 36, No. 3, 332-351.

奥田英信. 2000. 6. ASEAN의 金融시스템, 東洋經濟新報社.

尹春志. 1999. 3. "幻想としての 雁行形態的發展 -東アジア 通貨 金融危機와 構造的脆弱性 (I)." 東亞經濟研究 (山口大學 東亞經濟學會), 第 57卷 4号, 35-82.

進藤榮一(編). 1999. 아시아經濟危機를 讀み解く-雁は飛んでいるか, 日本經濟評論社.

(Appendix-1) 아세안 4개국의 몇몇 거시경제지표

		1996	1997	1998	1999	2000 1/4
태 국	GDP성장률	5.9	-1.7	-10.2	4.2	5.2
	수출(10억불)	54.7	56.7	52.9	56.7	16.6
	(무역수지)	(-16.1)	(-4.6)	(12.3)	(8.9)	(2.7)
	외환보유고	372	257	284	338	314
말레이시아	GDP성장률	8.2	7.5	-7.4	5.6	11.7
	수출(10억불)	78.1	78.7	73.3	81.6	22.2
	(무역수지)	(-0.3)	(0.1)	(15.0)	(20.2)	(4.2)
	외환보유고	262	200	247	297	327
인도네시아	GDP성장률	7.8	4.7	-13.2	0.2	3.2
	수출(10억불)	49.8	53.4	48.9	48.5	14.1
	(무역수지)	(6.1)	(11.7)	(24.5)	(24.6)	(7.6)
	외환보유고	178	161	224	262	283
필 리 핀	GDP성장률	5.8	5.2	0.5	3.2	3.4
	수출(10억불)	20.5	25.2	29.5	35.0	8.6
	(무역수지)	(-11.4)	(-11.2)	(-0.2)	(4.2)	(0.7)
	외환보유고	99	71	91	131	141

자료: 재정경제부 (한국). 2000. 9. 11.

(Appendix-2) FDI 인가액, 국별 및 부문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백만\$	%	백만\$	%	백만\$	%	백만\$	%
아세안-5	8,259	27.1	3,090	49.5	2,880	42.5	74	22.9
인도네시아	242	0.8	211	3.4	5	0.1	3	0.9
말레이시아	1,347	4.4	524	8.4	264	3.9	24	7.4
필리핀	291	1.0	7	0.1	0	0.0	0	0.0
싱가포르	5,299	17.4	1,215	19.5	16	0.2	35	10.8
태국	1,080	3.5	1,133	18.1	2,595	38.3	12	3.7
NIEs-3	10,963	36.0	137	2.2	554	8.2	136	42.1
홍콩	3,720	12.2	64	1.0	28	0.4	11	3.4
한국	3,124	10.3	73	1.2	455	6.7	5	1.5
대만	4,119	13.5	0	0.0	71	1.0	120	37.2
석유 & 가스	1,005	3.3	2,193	35.1	4,500	66.4	-	-
농업 & 임업	396	1.3	279	4.5	220	3.2	123	38.1
공업	11,912	39.1	1,140	18.3	545	8.0	73	22.6
호텔 & 부동산	6,459	21.2	1,638	26.2	605	8.9	103	31.8
간접자본	10,023	32.9	450	7.2	562	8.3	10	3.1
총계	30,465	100.0	6,243	100.0	6,779	100.0	323	100.0
기간	1988-1997. 12		1988-1997. 7		1988-1997. 4		1996. 1-12	

자료: Takeuchi, 1999, p. 125.

(Appendix-3) 투자유출, 국별 및 지역별(%)

		아세안-5	인도지아 & 미얀마	중국 & 홍콩	미국	기타
말레이 시아	1993	23.0	0.5	24.8	18.4	33.3
	1994	24.3	1.2	30.9	8.1	35.5
	1995	46.6	1.7	15.5	7.2	29.0
싱가포르	1993	27.5	NA	21.0	8.3	43.2
	1994	31.4	0.4	21.8	6.3	40.1
	1995	33.8	0.8	20.0	5.7	39.7
태국	1993	24.0	6.5	25.7	14.6	29.1
	1994	21.3	6.5	32.6	16.6	23.0
	1995	23.2	8.2	17.4	17.8	33.5

자료: Takeuchi, 1999, p. 117.

## ASEAN after Economic Crisis and the East Asian Growth Mechanism

Jong-Kil Kim

The fundamental question raised in this paper was to answer whether the so called East Asian growth mechanism that had been considered to have explained the growth of ASEAN quite well before the Asian economic crisis, can still have the explanatory power after the crisis and the subsequent economic restructuring. We first looked at various characteristics of East Asian growth mechanism, within the contexts of both internal (in which neo-classical, developmental state, and FDI-led variants were examined) and external models. We then tried to investigate the possible clues of East Asian growth mechanism,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the outbreak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1977.

One of the lessons we learned from this analysis was that ASEAN economies should lower their dependency upon external economies and watch external sources of distortion more carefully. However, we paid a deeper attention to internal or structural sources of the problem, particularly those of the financial sector. This was carried out by examining the nature and problems of economic restructuring in these economies after the crisis. Finally, we tried to anticipate some future prospects of East Asian growth mechanism in ASEAN which is still in the midst of its restructuring process.

We found that East Asian growth mechanism may still be useful in the future growth of ASEAN. But we also noted that the mechanism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following two important ways. First, the mechanism should pay a closer attention and incorporate external cooperation as well as internal restructuring of the financial sector of these economies. Second,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mechanism should be changed from that of the manager to that of the manager plus umpire for ASEAN.

**Key Words :** East Asian growth mechanism, economic restructuring, neo-classical, developmental state, FDI-led.